

● 2024-10-10 ●

#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 2024-23호 (2024년 10월 10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이 법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내부통제기준 마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고, 플랫폼의 대금정산 기한 준수 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본 제도 개선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3.4조 원 감소하고 그 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이 0.9조 원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Focus 2.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 Focus 3.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 Focus 4. 2024 국정감사 - 주요 상임위 국정감사계획 및 일정

###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 ① 본회의 법률안 의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② 신규발의 법률안

- 주식회사·이사 충실의무·주주권익보호 관련 법안
- 기업 세재해택·가업상속 관련 법안
- 금융·대부업 관련 법안
-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법안
-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 정보통신망·인공지능 관련 법안
- 유통산업 관련 법안
- 기후 환경·에너지 관련 법안
- 해상풍력 관련 법안
- 근로자 권익·근무조건 관련 법안
- 기타 주요 법안

###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은행 예금·여신 분야 표준약관 개정

### Focus 1.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이 법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내부통제기준 마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1.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기관·법인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 증권사에 기관·법인투자자의 의무 이행 확인 의무 부과
-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제한할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의심 계좌 지급정지 가능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증액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 처벌 적용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가능)

##### 4. 기타 제도 개선

-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 5. 시행 및 계획

-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일부 조항(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지급정지)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24년 10월 중 하위 법령 개정 예정(공매도 잔고 공시강화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
- 2025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관련자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바로가기](#)

## Focus 2.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한 대금정산 기한 준수 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내용	업계 의견
대규모유통업법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설정</li> <li>•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의무 부과</li> <li>•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및 관리 비율 설정</li> </ul>	<p><b>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에 신중할 필요성 강조</li> <li>• 신생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 규율 강도 완화 요구</li> </ul> <p><b>입점 소상공인 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화된 규율 필요성 언급</li> <li>• 좋은 거래관행 유지를 위한 규제 강화 요청</li> </u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화</li> <li>• PG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실질적 관리 감독 수단 도입</li> <li>• PG업 범위 명확화 (타인을 위한 정산대행만 해당)</li> </ul>	<p><b>PG사 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 도입 필요성 공감</li> <li>•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 요구</li> </ul> <p><b>이용자·판매자 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li> <li>• 이용자·판매자 보호 강화 및 전자지급 거래 신뢰성 확보 기대</li> </ul>

### 관련자료

[보도자료]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바로가기](#)

## Focus 3.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2023년 新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되고 과소납세 이슈가 제기되어오며 따라 정부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본 제도 개선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3.4조 원 감소하고 그 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이 0.9조 원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주주배당 관련	• 보수적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대비 일정 비율 (예: 80%)만 적립하도록 허용
법인세 관련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 감소로 인해 손금 인정액도 감소하여 과소납세 이슈 해소. 단, 단기 납세액은 종전 대비 증가 가능성 있음
적용기준	• K-ICS 비율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적용(2024년 200%를 기준으로 매년 10%p씩 하향 조정하여 2029년 150%에 도달하도록 설계)
시행 및 계획	• 2024년 연말결산 시 적용하기 위해, 12월까지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

### 관련자료

[보도자료]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바로가기](#)

## Focus 4. 2024 국정감사 - 주요 상임위 국정감사계획 및 일정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현 정부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정 운영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 외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인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확인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주기 실태 및 불공정거래행위」, 「배달·유통업계의 수수료 논란과 특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등 내부통제 실태 및 책임」 등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일정	정무위원회	주요 일정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일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일정
행정안전위원회	주요 일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일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요 일정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일정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일정	환경노동위원회	주요 일정

## ① 본회의 의결 법안(2024년 9월 26일)

법률안	주요 내용
<p><b>본회의 의결</b>  <b>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                      2204335 / 환경노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의무화</li> <li>•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략 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li> <li>•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함</li> <li>•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li> </ul>
<p><b>본회의 의결</b>  <b>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                      2204334 / 환경노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li> <li>•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폭염·한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li> </ul>
<p><b>본회의 의결</b>  <b>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                      2204332 / 환경노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li> <li>•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유급휴가 2일),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li> <li>•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li> </ul>
<p><b>본회의 의결</b>  <b>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                      2204330 / 환경노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li> <li>•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신용정보 제공,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등)</li> <li>•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li> <li>•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li> </ul>
<p><b>본회의 의결</b>  <b>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                      220431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li> <li>• 국내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li> <li>•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li> </ul>

## ② 신규발의 법률안

### 주식회사·이사 충실의무·주주권익보호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b> 2204179 / 정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중소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3년간 유예</li> <li>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제출을 면제함</li> <li>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및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사유를 폐지</li> </ul>
<b>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b> 2204474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 침해 금지를 포함시켜,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li> <li>이사에게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li> </ul>
<b>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9인)</b> 2204475 / 법제사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li> <li>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를 이사회 1/3 이상으로 구성</li> <li>독립이사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li> <li>주주총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활성화하도록 함</li> </ul>

### 기업 세재해택·가업상속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b> 2204082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에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li> <li>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li> <li>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 또는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li> <li>녹색기술 투자 관련 공제율을 다른 투자에 대한 공제율보다 상향하고, 녹색기술 관련 자산 투자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포함</li> </ul>
<b>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b> 2204177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li> <li>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li> <li>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li> <li>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 인하</li> <li>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폐지</li> </ul>

법률안	주요 내용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b> (이정문의원 등 11인) 2204490 /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기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동일한 세제 혜택 부여)</li> </ul>

## 금융·대부업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 (강민국의원 등 10인) 2204194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법성을 명확히 함</li> <li>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li> <li>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li> <li>불법사금융업자 대부계약 시 상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li> <li>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처벌 기준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로 상향</li> </ul>
<b>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b> (이성권의원 등 18인) 2204285 / 행정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고의 상환준비금 전액을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li> <li>적립금 관리를 강화하여 자기자본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2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또 다른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함</li> <li>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부실자산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li> <li>주무부장관의 금고, 중앙회, 관리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을 강화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 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함</li> </ul>
<b>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b> 2204489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위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 운영 규정을 법률에 명시</li> <li>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li> <li>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함</li> <li>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관리의 독립성을 강화</li> </ul>

##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b> 2204456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li> </ul>
<b>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b> 2204032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현행법상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li> </ul>



법률안	주요 내용
<b>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b> 2204452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부여</li> </ul>
<b>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b> 2204548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li> <li>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li> <li>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li> </ul>

## 전자상거래·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의의원 등 11인)</b> 2204234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관리</li> <li>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하고, 서비스 이용 조건 등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li> <li>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 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함</li> <li>긴급 시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li> </ul>
<b>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1인)</b> 2204346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중개거래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연평균 매출액 4조 원 이상 또는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li>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li> <li>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li> </ul>
<b>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b> 2204512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li> <li>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공시하고, 매년 사업 개요, 불만처리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li> <li>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li> <li>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li> <li>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li> </ul>

## 정보통신망·인공지능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 <b>(이상희의원 등 12인)</b> 2204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망 내 정보게재자에게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이의 제기 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직권조정절차를 개시</li> <li>삭제·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모욕까지 확대</li> <li>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분쟁 조정 외에 게재된 정보 삭제 적부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등을 담당</li> <li>온라인피해365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li> </ul>
<b>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의원 등 19인)</b> 220425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 관련 시책 개발, 사업 기획·시행 등을 수행하도록 함</li> <li>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li> <li>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활용·제공자는 해당 시가 고위험영역 AI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제공 전 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li> </ul>

## 유통산업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b> <b>(정혜경의원 등 10인)</b> 220406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함</li> <li>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li> </ul>
<b>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b> <b>(오세희의원 등 11인)</b> 220425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li> </ul>

## 기후 환경·에너지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의원 등 10인)</b> 2203992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적응역량과 기후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법률 제정</li> <li>환경부장관을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로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들의 협력 의무를 규정</li> <li>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li> </ul>

법률안	주요 내용
<b>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b> <b>(고동진의원 등 13인)</b> 220418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에너지 활용 인증을 받은 반도체 분야 등의 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li> <li>정부는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li> </ul>
<b>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b> <b>(서왕진의원 등 13인)</b> 220406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9월,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입법 흠결이 발생</li> <li>이에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li> </ul>
<b>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b> <b>(박성민의원 등 10인)</b> 220449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평가, 과징금 부과, 검증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신설</li> <li>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측정, 신고 등 의무사항을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li> <li>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며 사후관리의 근거를 신설</li> <li>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의 부분을 분리하여 수송부문으로 신설</li> </ul>
<b>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b> <b>(김원이의원 등 12인)</b> 220433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사업에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li> </ul>
<b>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b> <b>(송재봉의원 등 13인)</b> 220445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li> </ul>
<b>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b> <b>(허종식의원 등 12인)</b> 22045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li> </ul>
<b>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b> <b>(김교홍의원 등 12인)</b> 22045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li> </ul>

## 해상풍력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중식의원 등 11인)</b> 220437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li>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li> </ul>
<b>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익의원 등 26인)</b> 220437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바람연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함</li> <li>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li> </ul>
<b>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의원 등 13인)</b> 220447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필요시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li> <li>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li> <li>발전지구 지정 후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속이용요금 부과 가능</li> <li>실시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li> </ul>

## 근로자 권익·근무조건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b>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5인)</b> 2203990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이전이 있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li> <li>사업이전 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고, 승계대상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승계거부권과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li> <li>사업이전 후에도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li> <li>사업이전 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규정</li> </ul>
<b>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b> 2204437 / 환경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함</li> <li>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일정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li> <li>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 개선으로 추가 간접비용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이 분담하도록 함</li> </ul>

## 기타 주요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p><b>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b> (고동진의원 등 14인) 220457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특례는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기간 확대</li> <li>•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li> <li>•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li> <li>• 관련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li> </ul>
<p><b>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b> 2204290 / 환경노동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 등은 그 제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 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li> <li>•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제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li> <li>•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li> <li>•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당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을 설치</li> </ul>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 시행령·시행규칙 의결 및 입법예고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4-09-30

시행일자	9월 30일 배포와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행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li> <li>상품권 환불요건을 확대하여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li> <li>'상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로 '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li> </ul>

### 은행 예금·여신 분야 표준약관 개정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4-09-30

시행일자	9월 30일 배포와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즉시 통지하고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li> <li>약관 변경 시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여 통지</li> <li>약관 변경 시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1개월'로 통일</li> <li>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 삭제</li> </ul> <p><b>(참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출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상환 연체 시 과도한 이자 부담이 제한됨.</li> <li>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li> <li>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은행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음</li> </ul>

## 입법지원팀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사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수석 전문위원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